

실적 갑자기 나빠졌다면... CEO교체기 '빅배스' 의심을

(잠재손실 미리 반영)

많은 손실 반영... 실적 부진 기록 재무구조·체질 개선 가능성 호재

기업들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을 지난해 4분기에 앞당겨 반영하는 '빅배스(Big Bath)'에 나서고 있다. 당장은 어닝 쇼크를 걱정하는 분위기가 짙지만 '선제적 위험관리'란 긍정적 측면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빅배스란 새로 부임하는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의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임 CEO의 재임기간에 누적된 손실을 최대한 털거나 과도하게 상각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도 흔히 발행한다.

◆털고가자 '빅배스'의 유혹

3월 증권업계와 체계에 따르면 기업들의 '빅배스'가 잇따르고 있다.

두산건설은 2017년 말 자기자본 35%에 해당하는 손상차손 3390억원이 발생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손실은 521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매출액은 0.8% 증가한 1조5478억원, 당기순손실은 적자 폭이 확대된 5518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두산건설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환경 변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관련 추가손실 가능성 차단 등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다며 올해 이후 추가 손실 가능성이 작다고 예상했다.

AJ렌터카는 지난해 연결 영업이익이 225억원으로 전년보다 40.7%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매출액은 6527억원으로 2.5% 늘고 당기순손실은 19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KTB투자증권김재운 연구원은 "4분기 진행된 주요 자회사(링커블·AJ테크·AJ셀카·AJ캐피탈파트너스 등) 지분 매각에 따라 관계기업 투자손실 40억원이 반영됨에 따른 것이다"면서 "SK네트웍스로의 피인수 과정에서 많은 손실이 반영되

며 부진한 4분기 실적을 기록했지만 2019년 턴어라운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조6512억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전년 대비 7.2%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6924억원으로 전년보다 27.6% 줄었다. 4분기 빅배스의 영향이다.

대신증권 양지환 연구원은 "4분기 실적은 빅배스성 비용 반영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면서 "지난 4분기 실적보다 2019년 유가하락에 따른 이익 개선 모멘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G그룹 계열사들도 지난해 4·4분기에 빅배스 성격의 부진한 실적을 냈다. 구광모 회장이 그룹을 지휘하면서 과거 부진을 털고가기 위한 해석이란 시각이 있다.

LG전자가 작년 전체 매출액 61조3399억원을 기록하면서 2년 연속 매출 60조원을 돌파했고 연간 영업이익 2조7029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실적 부진'으로 인

해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753억원으로 급감하며 시장 전망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LG디스플레이·LG화학·LG유플러스 등 주요 계열사도 지난해 부진의 늪에 빠졌다.

한국투자증권은 2018년에 연결재무제표 기준 8조317억원의 매출액과 644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2017년보다 매출액은 29.5% 늘고 영업이익은 6.0% 줄어든 수치다. 당기순이익도 전년 대비 5.2% 감소한 4983억원으로 집계됐다.

◆장기적 체질 개선 동반된다면 호재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가 한창인 기업들이 잇달아 어닝쇼크를 내자 시장에서 다양한 해석이 제기된다.

특히 오너가 없는 기업은 책임 경영이나 효율적 투자 결정이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실적 턴어라운드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적잖다.

실제 적잖은 상장 공기업이 덩치(자산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지만 수익성은 제 자리를 맴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흑자를 내는 곳도 장사를 잘해서라기 보다는 매년 공급 가격이 오르거나 시장상황이 좋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과거 공격적 투자 정책이 기업가치 상승이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레버리지만 키웠다는 비판도 적잖다.

건설사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는 않다. 두산건설이 뒤늦게 잠재부실을 털어냈듯이 건설업종에서도 그동안 흑자를 기록한 기업들 중에서 빅배스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증권가에서는 빅배스 기업들에 투자자 치 측면에서 후한 점수를 주는 편이다.

증권가 한 애널리스트는 "대규모 부실을 털었다는 측면에서 재무구조는 좋아질 가능성이 더 크다"면서 "다만 근본적인 사업 체질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은행 주택대출 분할상환 비중 50% 돌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이 5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정금리 비중은 45.0%로 역대 최고로 조사됐다. 3일 서울 중구 명동 한 시중은행에 대출 금리 안내문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50대가구 가처분소득, 전년比 10만2000원 ↓

지난해 4분기 50대 가구주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2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이란 국민 소득 통계상의 용어로 개인 소득 중 소비·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가처분소득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가계의 실질적인 경제 여력이 줄었다는 뜻이다.

고용 완화와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로 은퇴를 앞두고 있는 50대 가계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3월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4분기 50대가 가구주인 가계의 명목 월평균 가처분소득(전국·2인 이상)은 412만원으로 1년 전보다 10만2000원(2.4%) 줄었다.

50대는 가장 많은 인구가 몰려있는 연령층으로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일부 포함돼있다. 저출산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지난해 50대 인구 비중은 16.6%를 기록, 40대(16.4%)를 넘어섰다.

50대 가구주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지난해 상반기 3% 내외의 증가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3분기 제자리걸음(0.0%)에 이어 4분기에는 2013년 4분기(-0.5%) 이후 5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60세 이상 가구주와 40대 가구주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각각 8.0%, 6.3% 늘었다. 39세 이하 가구주 가계는 사실상 제자

리걸음(-0.1%) 했다.

50대 가구주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에는 최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계속된 고용 부진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 50대 가구주 가계의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소폭(-0.1%) 줄면서 2013년 4분기(-0.7%) 이후 5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근로소득이 주축하면서 전체 소득 증가 폭은 2017년 2분기(0.5%) 이후 가장 작은 1.3%에 그쳤다.

반면, 50대 가구주 가계의 비소비지출은 125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16만8000원(15.5%)이 늘었다.

이중 이자비용은 4만1000원(48.2%)이나 늘면서 증가세를 견인했다. 경상조세도 7만2000원(42.2%) 늘었다. 전체 가구 평균 이자·경상조세 증가율은 24.1%, 29.4%로 50대 가구주 가계와 큰 차이를 보였다.

최근 수년간 가계부채가 급격히 팽창한 상황에서 지난해 금리까지 오르면서 50대 가구주의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기준 50대 가구주 가계의 평균 금융부채는 9104만원으로 40대(9979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금융대출 중 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비중은 50대(15.4%)가 40대(13.9%)보다 더 높았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높아진 대출문턱에 P2P대환대출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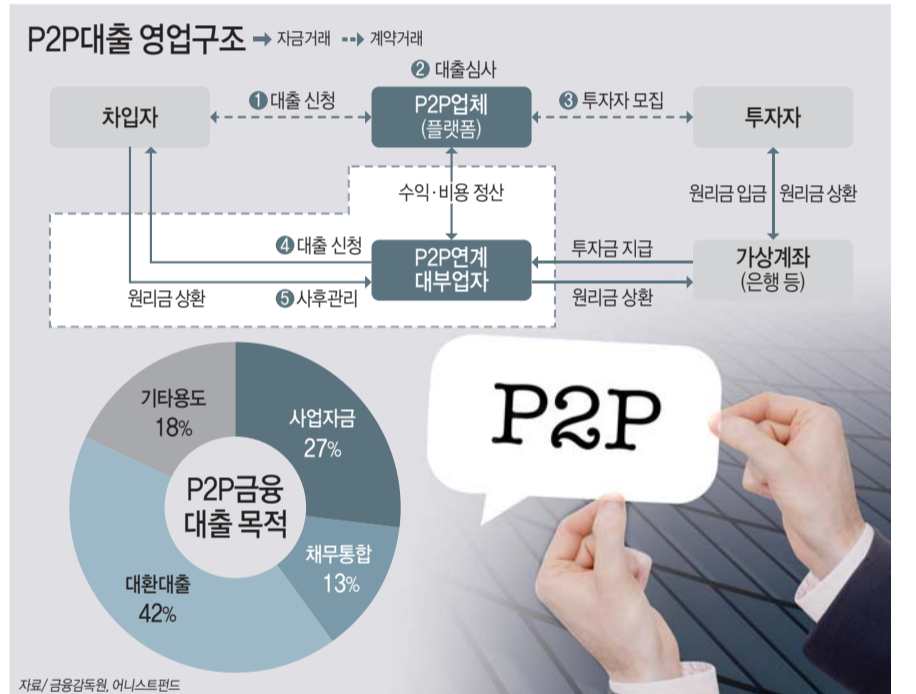
P2P 이용자 절반 가량 대환대출 투자자 보호 등 법안 미비 주의해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에 대출문턱이 높아지면서 P2P(Peer to Peer·개인간) 금융업체를 이용하는 차주가 늘고 있다.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까지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차주가 P2P업체로 몰리고 있는 것. 하지만 P2P금융에 대한 법안이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여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P2P업체를 이용하는 차주 10명 중 4~5명이 대환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신용대출업체 렌딧의 대환대출 이용 차주는 전체 차주의 54% 이상으로 지난 2016년 42.5%가 대환대출을 이용했던 것에 비해 12% 이상 증가했다. 또 다른 P2P업체 어니스트펀드도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이 42%에 달한다고 밝혔고, 8퍼센트도 4~7등급의 대환대출을 진행해 절감한 이자가 124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P2P업체 관계자는 "상당하는 비중까지 합치면 대환대출을 이용하기 위해 찾는 경우가 제법 많다"며 "저축은행에서 거절당한 중·저 신용등급인 차주들이 여기에선 또 다른 심사평가체계로 10%대의 중금리 대출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대출규제 강화로 2금융권 심사기준이 높아지자 상대적으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차주들이 P2P업체로 몰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P2P업체는 최근 투자자 모



으기에 한창이다. 투자금으로 대출이 진행되는 P2P업체 특성상 투자자가 많아 대출해 줄 수 있는 차주도 늘어날 수 있어서다. 최근 퍼플펀드는 카카오페이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품을 출시했고, 렌딧도 자체 개발한 분산투자 추천 시스템을 통해 100개 이상의 채권을 묶은 포트폴리오 투자 상품을 내놓았다. 하지만 P2P금융의 경우 아직까지 투자자보호 등 관련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우려도 적잖다. 투자자는 P2P업체의 경영상황이나 차주의 상황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고, 차주는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곧 사생활 침해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최중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2월 P2P금융 공청회를 통해 "제도적 통제 장치

가 충분하지 않거나 P2P업체의 윤리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소비자 피해와 시장 불신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성장기에 이른 P2P금융을 위해 차입자와 투자자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법제화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최근 중국의 경우 문턱이 낮고 관리감독이 소홀해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P2P 대출 업체들이 줄줄이 퇴출되는가 하면 디폴트(채무불이행) 역시 급증하고, 사기 행위마저 횡행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 중국정부도 P2P대출업체에 대해 ▲P2P업체 신규 신설금지 ▲감시감독강화 ▲고의도산업체 경영진 강력처벌 ▲채무자 신용정보 망 등록관리 등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대신·신영·한투,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금융위, 증선위와 임시회의서 의결

대신자산신탁, 신영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등 3곳이 부동산신탁업 진출을 위한 예비인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3일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임시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들 3곳에 대한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신규 부동산신탁사가 나오는 건 10년 만이다. 지난 1991년에 도입된 이후 11곳이 인가됐고, 2009년부터는 새롭게 인가받은 곳이 단 한 곳도 없다.

신영자산신탁은 신영증권이 유진투자증권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립을 추진 중인 회사이고 한투부동산신탁은 한국투

자금융지주, 대신자산신탁은 대신증권이 각각 설립할 예정인 회사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외부평가위원회가 이들 3곳이 요건을 충족하면서 사업계획 등이 다른 신청회사에 비해 우수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예비인가를 받은 3곳은 앞으로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이후 한달 안에 본인가를 받으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나유리 기자